

산업재해율, 사상 첫 0.5%대 진입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사상 처음으로 0.5%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전년(0.65%)에 비해 0.06%p가 감소한 0.59%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1972년 산재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며, 2006년(0.77%) 이후 6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산재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해자수는 총 92,256명으로 전년(93,292명) 대비로 1,036명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이 같은 결과는 전년보다 사업장수(87,100개소)와 근로자수(1,186,051명)가 모두 증가한 상황에서 나온 성과라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재해율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지난 2010년 출범한 안심일터 추진본부의 산재예방활동이 산업현장 곳곳에 전파된 것은 물론 고용부가 지난해부터 확고하게 법 질서를 세워 안전보건정책을 펼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해율 감소와 더불어 사망만인율 등의 각종 수치도 전년 대비로 감소했다. 먼저 사고 재해율은 0.55%로 전년(0.60%)에 비해 0.05%p 줄어들었다. 또 2011년 1.3을 기록한 사망만인율도 지난해 1.2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은 0.73(2011년 0.79), 질병 사망만인율은 0.47(0.51)로 각각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567명의 재해자가 늘어났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의 81.5%를 차지한 것이다. 또 재해유형별로는 전도, 협착, 추락 등 이른바 3대 재래식 재해의 발생비중이 절반(49%)에 가깝게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해의 경우 대형사고가 빈발하면서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로 4명 증가한 1,864명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용부는 소규모 및 사망사고위험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사업장에 재해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특히 화재·폭발·누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관리 부실

안전시설 불량으로 286개소가 사법처리(형사입건) 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를 4월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감독을 받은 건설현장 중 639곳(94%)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14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0곳은 작업을 부분적으로 중지시켰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목적 외 사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등의 법위반 행위를 한 443곳(감독실시 현장의 65%)에는 과태료 총 6억2천여 만 원을 부과(1곳당 평균 140만 원)했다.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근로자 477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법위반 건설현장 중 286곳(42.1%)의 현장소장과 사업주인 법인을 사법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건설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오는 10월말까지 7개월간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세대·연립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기동반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청에서 운영한다.

화학사고 근절 위한 '감독관 책임전담제' 실시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대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고용부는 최근 정현옥 차관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부서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예방활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취약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그 결과 고용부는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서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감독관 책임전담제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부서장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지정, 감독관별로 전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생산시설 및 화학물질 사용현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활동 ▲정기 또는 수시 유지·보수작업 계획 ▲사내협력업체 현황 등 사고예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밀착 관리한다.

또 고용부는 최근 사고가 유해위험업무의 외부 하청화, 시설 노후화, 외주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부실, 작업자의 작업절차·안전수칙 경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화성 불산 누출사고, 여수산단 사일로 폭발사고 등이 야간·휴일에 발생한 점에 유의하여 이러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작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울산, 여수 등 주요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는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전반적으로 재고시키기 위해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문적인 안전진단 등을 통해 사업장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행해져야만 작업재개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부 정현옥 차관은 "현장 감독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 화학사고 등 중대사고 예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일선조직 간에 업무연계와 소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리감독기관과 사업장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일제점검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험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0개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지도·점검 대상기관은 4년제 대학 90곳, 2·3년제 대학 65곳, 연구기관 45곳 등 총 200개 기관이다.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상기관은 대학 15곳과 연구기관 5곳 등 총 20개 기관이다.

점검을 통해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이행 여부와 정부수탁 연구과제의 안전관리비 계상 현황 및 집행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다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실의 공기질을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부는 대상기관의 주요 연구 분야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5개 연구실 내외로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측정 장비를 통한 연구실의 위해 요인도 파악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연구·실험실 점검 결과는 선진적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